

# EU Brief

| EU 동향 |

- 한-EU 수교 50주년의 정치적 의미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EU Diplomatic Relations
- 역내 자금흐름 추이로 본 유로존 위기해법  
Solution to the Eurozone crisis with a focus on capital flow
- 2013년 이탈리아 총선 전망과 정치적 의미  
Italy's 2013 general election: prospect and political implications
- 2013년 한·EU 간 통상 이슈 및 전망  
Korea-EU FTA in 2013: trade issues & prospects
- 유럽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현황과 규제 논의  
Europe's shadow banking: current status and regulation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Focus

한-EU 수교 50주년의 정치적 의미	002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50 <sup>th</sup> Anniversary of Korea-EU Diplomatic Relations	



## EU Economy

역내 자금흐름 추이로 본 유로존 위기해법	006
Solution to the Eurozone crisis with a focus on capital flow.	



## EU Politics

2013년 이탈리아 총선 전망과 정치적 의미	011
Italy's 2013 general election: prospect and political implications	



## Trade & Investment

2013년 한·EU 간 통상 이슈 및 전망	016
Korea-EU FTA in 2013: trade issues & prospects	



## Industry Trends

유럽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현황과 규제 논의	020
Europe's shadow banking: current status and regulations	



## EU Law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024
EU Common trade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Korea-EU FTA	



## Social Issues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국적 획득에 대한 소고	027
On Gerard Depardieu gaining the Russian citizenship	



## Report Review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럽 경제의 성장	032
Investing in growth: Europe's next challenge	



## EU Centre news

제17회 브뤼셀 포럼	034
The 17 <sup>th</sup> Brussels Forum	
제17회 EU Core-Circle 세미나	035
The 17 <sup>th</sup> Core Circle Society Seminar	
제18회 EU Core-Circle 세미나	036
The 18 <sup>th</sup>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EU Brief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Yonsei-SERI EU Centre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The EU Brief is a newsletter publish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이종규 | 감수위원: 김득갑 | 편집담당: 이서영 | 게재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개선회장은 편집담당(02-3780-8306)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EU 수교 50주년의 정치적 의미

##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EU Diplomatic Relations

2013 marks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EU). In 1963, when Korea and the EU established the diplomatic ties, Korea was facing an upheaval as the military regime of Park Chung-hee was about to transfer its control to the civil administration. At the time Europe was laying the cornerstone for the integration as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EURATOM) were formally established among its six members: France, Germany, Italy, Belgium, Netherlands, and Luxembourg.

Korea and the EU have made a remarkable growth during the past 50 years. Korea is currently ranked as 12<sup>th</sup>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hile it has grown to one of the top democratic nations in Asia.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EU, composed of 27 sovereign member states, will gradually become the United States of Europe. It is amazing that European integration, which was originally pushed forward by only 6 members, has reached this level of success. Events were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of which Asian countries could not even imagine. Then, What message does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carry to the world?

The creation of the EU shows that the aspiration for peace for all mankind could be actually achieved. People often focus on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EU integration. Yet, this sort of perspective is only based on a narrow and outdated understanding about the EU.

Although the European integration was originally rooted from the ECSC, and it could be also viewed as economic attempt at a glance, but this kind of analysis is misleading. In fact, it was based on the long term political plan of preventing war and desire for peace settlement. Economic integration was just one of many goals. It was a functional approach to accomplish political unity through market interchange.

Europeans have a strong faith that all European countries are able to coexist in peace. The EU emphasizes that respecting human rights, freedom, and rule of law and also adhering to democracy as minimum requirement to be a member state.

Europeans stress on capitalism as an economic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at free market economy is vital to settle democratic politics. Two world Wars were caused because some countries tried to become more powerful by reigning over other nations forcefully to acquire their resources. Market economy, in which resources are freely exchangeable, is an important means to democracy.

There are some negative viewpoints such as that the Europe's integration could be delayed after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which began in 2011. However, such viewpoints are mistaken since they do not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objective, or simply focuses on the economic perspective. There were even more critical crises during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n the past.

There are 17 Eurozone member states within the EU. Even if some member states exit the Eurozone, the will

of Europeans for strengthening integration will not be weakened. Still,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wish to join the EU. What would be the reason for this? The answer is simple. As it is stated above, it is due to the sense of relief they get when becoming a member of the democratic camp. Joining the EU has a symbolic meaning that countries took an oath to respect human rights, freedom, and rule of law, and to become one nation. This is why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desire to join the EU. They know the importance of these values better than any other countries.

The creation and advancement of the EU show us the way of which we need to follow with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there are many implications. We signed 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in 2010. The Framework Agreement contains our promise to keep adhering the democratic values. It also means that both parties trust each other all the time as sharing the same political philosophy. ★

Yeon-ho Lee,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Vice Director of Yonsei-SERI EU Center





# 한-EU 수교 50주년의 정치적 의미

2013년은 한국과 EU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다. 1963년 한국과 EU가 수교를 맺던 당시 한국은 박정희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앞두고 있었고, 유럽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발족하여 통합의 초석을 놓고 있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EU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원조 수혜국이던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유럽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여 유럽합중국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6개국이 추진하던 유럽통합 작업이 오늘날 이 정도로 진전된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통합은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EU의 탄생은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염원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는 EU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당초 석탄철강공동체로 시작한 유럽통합 작업은 일견 경제적인 시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경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시장 교류를 통해 정치적 통합에 이르려는 기능주의적 접근인 것이다.

유럽인들은 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끼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EU는 회원국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인

권, 자유 그리고 법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중시한다. 민주주의적 정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통합된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특정 국가가 자원을 독점하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자원의 교환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적 정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의 통합이 후퇴할지도 모른다고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유럽통합의 역사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본 그릇된 인식이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얼마든지 있었다.

유로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EU 27개 회원국 중 17개국이다. 설령 이 중 몇 나라가 탈퇴한다 하더라도 유럽통합을 향한 유럽인들의 의지가 후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EU에 가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EU 가입은 인권과 자유와 법치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EU 가입을 희망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즉,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다.

EU의 탄생과 진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지금까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가 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왜 북한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류에 동참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2010년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우리가 EU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봉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 양자가 같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서로 신뢰하는 것이다. ★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SERI EU센터 부소장





# 역내 자금흐름 추이로 본 유로존 위기해법

## Solution to the Eurozone crisis with a focus on capital flow.

The Eurozone has escaped from the worst case scenario—its breakdown—but there is hardly any room for relief. This is because the fiscal position continues to be deteriorated due to economic downturn and there continues to be an imbalance in the capital flow in the Eurozone. One cannot expect the crisis to be fundamentally resolved unless the problem of lack of liquidity in Europe's periphery is addressed. There has been an inflow of capital into the periphery recently; but it will take more efforts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the level of inflows to reach the previous average. It is therefore prudent for firms to constantly monitor the economic situation as well as the flow of capital between member countries.

### 유로존 경제가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세계은행은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의 핵심 내용은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춘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유로존 경제가 2012년(-0.4%)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0.1%)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2년 6월 전망에서 유로존 경제가 2013년에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6개월 만에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재정위기가 유로존의 은행과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로존 위기를 진단해보고, 실물경제 회복의 관건이 되는 유로존 내 자금흐름의 변화 추이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유로존 위기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자 지난 7월까지지만 하더라도 유로존 해체론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드라기 ECB 총재의 국제매입 시사 발언과 ECB의 무제한 국제매입정책 발표에 힘입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호전되었다. 또한 유럽안정화 기구 출범과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도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유로존 차원의 정책 대응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시장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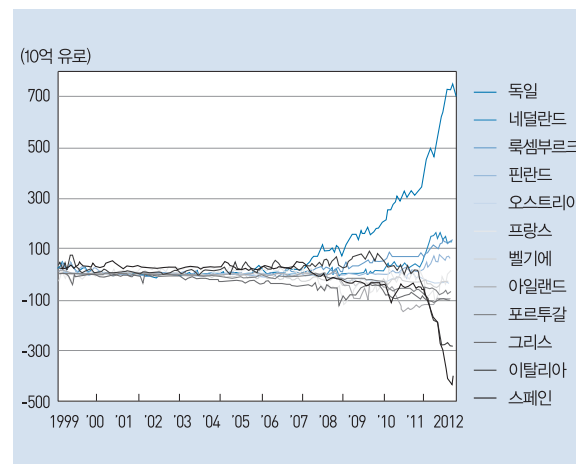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쇼이블러 독일 재무장관과 드라기 ECB 총재가 그리스의 상황 개선과 유로존 차원의 위기 대응책에 힘입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등 유로존 위기 해소의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유로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불안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다.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는 2012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으며,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하다. 재정 위기국들은 긴축과 신용경색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로존 경제를 견인해온 독일과 프랑스도 수출 경기 위축으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당초 계획했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불안요인은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자금흐름 양극화,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주변국들은 중심국의 자본에 의존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유로존 가입 이후 주변국들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해

외자본 의존도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주변국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자금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혹은 자본거래를 위한 국제결제의 상당 부분을 유로시스템(ECB와 유로존 17개국 중앙은행 체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자본 잉여국의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들이 예치한 잉여자금을 ECB에 빌려주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자본 부족국의 중앙은행은 EC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국 은행에 대출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 TARGET2<sup>1</sup> 수지가 균형을 이루었지만, 위기 이후에는 중앙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TARGET2 수지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 ★ 유로존 국가별 TARGET2 수지 추이



자료: ECB

### 유로존 내 자금흐름의 정상화가 필요

유로존 위기가 최악의 고비를 넘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금흐름 정상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재정위기국들의

<sup>1</sup> 유로존 회원국 등 EU 국가들의 국내 및 해외 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가동되었다. 현재 23개국 중앙은행과 4,400개 이상의 상업은행이 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2012년 3/4분기에 거래건수 2,230만 건, 거래금액 146조 6,30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현재 유로존 전체 거래건수의 58%, 거래금액의 92%를 담당하고 있다.

채무상환능력 확보다. 재정위기국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은 어렵기 때문이다.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로존 내 자금흐름의 추이를 분야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매분기 발표하는 ‘은행의 해외 익스포저’를 정부, 은행,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위기 이후 유로존 내 자금흐름의 추이와 양극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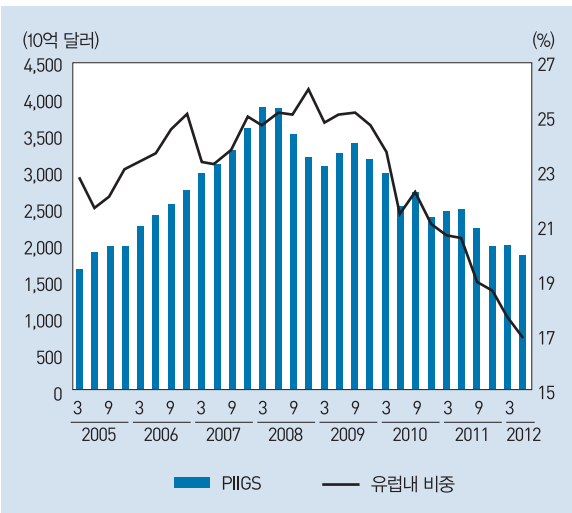
유럽 은행은 재정위기국의 주요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6월 말 현재 5개 재정위기국에 대한 24개 주요국 은행들의 익스포저 중 유럽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순으로 은행 익스포저가 많다. 특히, 프랑스 은행들이 최대 자금공급자로서 5개 재정위기국에 총 5,400억 달러(비중 26.4%)의 자금을 대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럽 은행들의 자금흐름 향방이 재정위기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국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가 급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은행 자금이 재정 위기국에 계속 유입되어 2008년 상반기에 유입액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중 5개 재정위기국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는 13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포르투갈(167%), 아일랜드(155%), 그리스(140%), 스페인(137%), 이탈리아(115%)의 순이었다. 외국은행의 유럽 내 자금 유입액에서 5개 재정위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2월에 최고치인 26%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사태를 계기로 재정위기국에 대한 24개국 은행의 익스포저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그리스발(發) 재정위기가 시작된 2009년 말부터 은행들은 재정위기국에서 대출 및 투자자금을 본격 회수하였다. 2012년 6월 현재 5개 재정위기국에 대한 24개국 은행의 익스포저는 최고치 대비 48%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 23%, 아일랜드 44%, 스페인 49%, 이탈리아 53%, 포르투갈 56%를 기록하였다. 5개 재정위기국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가 전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9%로 하락하였다.

★ 5개 재정위기국에 대한 24개국 은행의 익스포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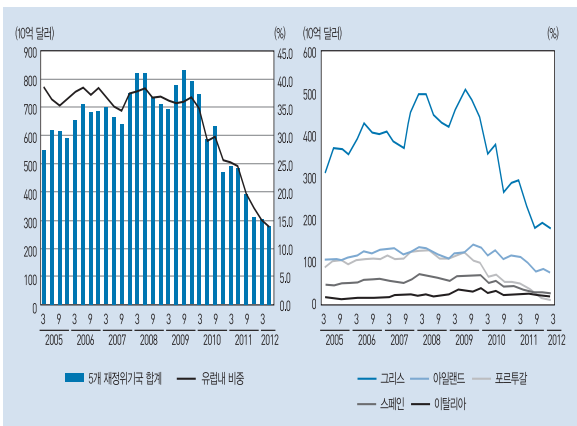
자료: BIS (각 연도), Quarterly Review, 각 호.

정부 및 은행 부문의 자금유입이 크게 감소

우선, 주요 은행들의 정부 부문 자금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들의 정부 부문 자금흐름은 주로 국채매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은행들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대거 매입한 결과 은행들의 국채 보유액이 2009년 9월에 8,32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가 무(無)위험 자산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국가채무위기가 불거지자 은행들은 앞다투어 재정위기국 국채를 매각했다. 그 결과 전체 은행의 재정위기국 국채 보유액은 2012년 6월 말 2,840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채 보유액이 크게 줄었다. 은행들의 그리스 국채보유액은 국가부도와 유로존 탈퇴 우려, 채무 재조정 등으로 1,224억 달러(2008년 6월)에서 40억 달러(2012년 6월)로 급감했다. 또한 은행들의 이탈리아 국채 보유액도 5,003억 달러(2009년 9월)에서 1,750억 달러(2012년 6월)로 감소했다.

다음은 주요 은행들의 유로존 은행 부문에 대한 자금흐름이다. 은행 간 자금흐름은 주로 은행 간 자금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먼 사태 이후 주요국 은행들은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재정위기국 은행들에 대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자금도 회수했다. 위기 초기에는 그리스

★ 재정위기국 정부 부문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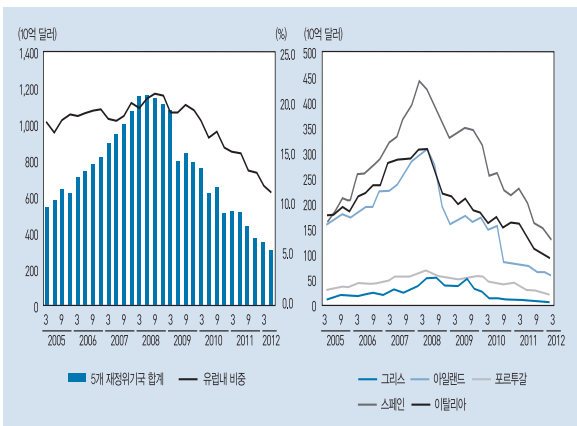
자료: BIS (각 연도), Quarterly Review, 각 호.

와 아일랜드 은행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2년 들어서는 스페인 은행들도 자금 부족으로 중앙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재정위기국 은행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는 총 1조 1,520억 달러(2008년 6월)에서 2012년 6월에 3,000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특히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으로 은행 부실이 심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감소폭이 가장 현저하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가계 및 비금융회사)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흐름이다. 위기 이후 재정위기국의 민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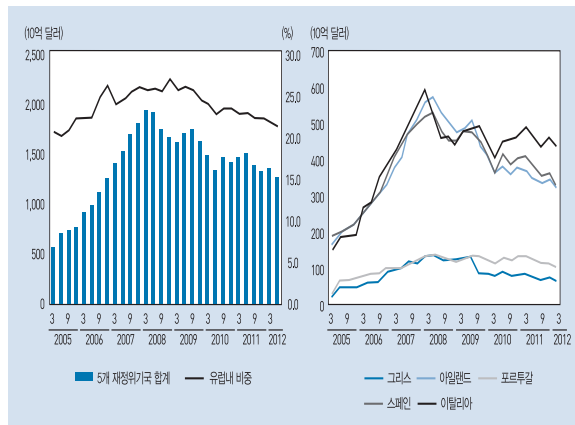
★ 재정위기국 은행 부문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 추이



자료: BIS (각 연도), Quarterly Review, 각 호.

문에 대한 전체 은행들의 익스포저는 줄었으나, 정부 부문이나 은행 부문보다는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2012년 6월 재정위기국의 자금 유입액은 최고치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의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디레버리징으로 해외자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 재정위기국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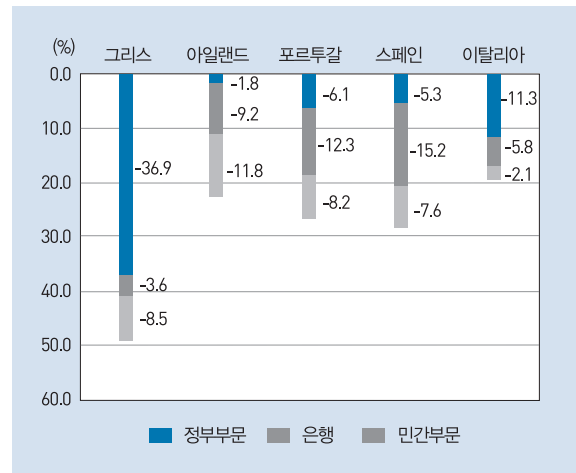


자료: BIS (각 연도), Quarterly Review, 각 호.

지금까지 살펴본 자금흐름의 추이를 종합해 보면, 은행 익스포저 감소로 재정위기국의 은행과 정부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재정위기국들은 은행 결제에 필요한 자금은 유로시스템으로, 정부 부문의 부족한 자금은 자국 은행이나 ECB, 각국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해 조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자금흐름의 양극화에는 독일 은행들의 익스포저 축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 내에서는 독일 자금의 대거 이탈로 자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위기국의 자금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금흐름의 양극화에 따른 재정위기국의 신용경색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로 인

★ 재정위기국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 증감률



주: 2010년 12월~2012년 6월 변화율  
자료: BIS (각 연도), Quarterly Review, 각 호.

해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의 근본 해결도 어렵다. 유로존 붕괴 우려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유로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위기국에 자금이 다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내 자금흐름의 정상화 방안

그렇다면 유로존 위기 해소의 관건인 역내 자금흐름을 어떻게 정상화해야 할까? 우선, 은행 구조조정과 은행 동맹을 통해 은행시스템의 신뢰를 하루속히 제고해야 한다. 재정위기국을 포함해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3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의 은행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로존 차원에서는 은행동맹(Banking Union) 완성을 위해 부실은행 정리기구 설립과 단일 예금보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안정화기구가 부실은행의 자본 확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부실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둘째,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면 은행의 담보요건을 완화하고 LTRO<sup>2)</sup>(3년 만기 저리대출<sup>3)</sup>)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 발표 이후 자금흐름에 긍정적인 조짐



# 2013년 이탈리아 총선 전망과 정치적 의미

## Italy's 2013 general election: prospect and political implications

Italy is regarded as a country with political dynamism and radical changes. We expect to see another political drama as the abrupt resignation of Berlusconi in November 2011 meant that Italy needs to hold a general election in February 2013. The Monti cabinet that came to power in December 2011 implemented austerity measures to save Italy from the brink of default and helped escape the worst economic crisis so that Italy did not have to rely on EU's financial assistance. However, there has been some strong public and political opposition against his administration. Many are critical of his policies because it raises a possibility of a long-term stagnation. Italy has an important decision to make and this article forecasts the outcome for the upcoming election and provides a brief analysis on Italian people's criteria for selection of their leaders.

### 1. 이탈리아 정치 환경과 경제위기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인 역동성이나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탈리아가 2011년 11월 말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퇴 이후 다시 한 번 정치적인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고 있다. 바로 2013년 2월 예정된 총선이다. 2011년 12월에 출범한 몬티(Monti)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내각은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의 성격을 띤 경제전문 관료와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내각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선택한 전문 관료 내각의 성격이 강했다. 몬티 내각은 베를루스코니의 실각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추스르고, 경제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를 국가부도나 유로존 탈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몬티 내각은 지난 13개월간 과도 정부를 이끌면서 재정적자의 주범인 연금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행해왔다. 이러한 긴축재정정책의 실현으로 이탈리아는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났고, EU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정치권과 국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 감소와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실패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몬티 내각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이와 같은 과도기적이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이탈리아의 2013년 2월 총선을 전망해볼 때 동시에 이탈리아 국민의 선택 기준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2013년 2월 총선을 앞두고 몬티 총리가 사임하기 전까지 논의되었던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어떤 쟁점과 조항들이 논의되었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는 총선 전까지의 정치적 상황과 주요 정당 구조 및 인물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이탈리아 정치적 리더십과 차기 총리의 가능성을 조심히 전망하고자 한다. 셋째는 선거의 쟁점 및 내용들과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정치'와의 정치적 상관성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13년 2월 24~25일 총선 결과를 전망할 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1994년 총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좌우연정이 교대로 집권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 순서가 지켜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94년 베를루스코니 중도 우파연정, 1996년 프로디의 중도 좌파연정, 2001년 베를루스코니 중도 우파연정, 2006년 프로디의 중도 좌파연정, 2008년 베를루스코니의 중도 우파연정까지 우파와 좌파 연정이 번갈아 집권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중도 좌파연정 차례가 될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캔들의 제왕이자 온

이 나타나고 있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 ECB는 유동성 공급정책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담보요건 완화와 함께 LTRO 상환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려면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위기국 은행들의 국채 매입이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의 국채 매입은 국채금리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을 위축시키는 문제와 함께 정부-은행 간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은행이 본연의 임무인 자금중개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아 경기회복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의 국채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가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자금흐름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

지금까지 유로존 내 자금흐름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와 자금흐름의 양극화 현상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로존 위기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정위기국의 자금부족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위기의 근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재정위기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자금유입 규모가 예년의 정상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유로존과 각 회원국들의 경제 상황 및 자금흐름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sup>2</sup> LTRO: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sup>3</sup> ECB는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 각각 4,892억 유로와 5,295억 유로의 자금을 3년 만기 1% 저리로 은행에 공급하였는데, 1차 LTRO에는 523개 은행이, 2차 LTRO에는 800여개 은행이 참여하였다.

갖 정치적 악행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루스코니가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중도 우파연정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그의 정치적 복귀와 재기가 가능한지가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관료 정부의 총리인 몬티가 사퇴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총리 복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나, 2008년 무지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원내에서 사라져버린 좌파 정당연합의 원내 복귀 가능성과 개혁적인 검사를 앞세운 시민단체의 정당조직화 등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변수들이다.

더군다나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야당의 총리후보 경선에서 렌지(Renzi)라는 약관 38세의 피렌체 시장의 등장은 비록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정치적 배경이나 정치문화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유사한 이탈리아의 2013년 정치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의 선택 역시 주목받고 있다.

## 2. 2013년 총선의 쟁점과 전망

2013년 2월 24~25일 이틀간 치러질 이탈리아 총선의 총 유권자 수는 5,102만 6,177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180만명 정도 많으며, 총 6만 1,571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해외선거구 유권자 수도 65만 7,915명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 12월 몬티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수많은 정치개혁 논의와 선거법 개정 등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몬티 내각이 추진하였던 선거법 개정의 여러 쟁점들은 국민의 환영을 받았지만, 몬티의 사퇴와 동시에 선거법 개정의 추진력이 사라졌고 현재는 의회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 중이다.

이탈리아에서 선거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

한 것은 2012년이였다.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배경에는 다가올 총선에서 지금의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요소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올바른 비례대표제도의 정착과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쇄조항 비율과 내용, 다수당 프리미엄 제도, 동트식 의석배분 방식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이 동의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을 발의하고 이를 의회에서 논의하였다.<sup>1</sup>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추어 의석 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상하 양원 의석 수의 축소는 새정치를 바라는 이탈리아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하원 의석 수 630석에서 520석으로, 상원 315석에서 260석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여당과 야당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몬티의 갑작스런 사임과 의회 해산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 여건이 소멸해버렸고, 결국 이 문제는 2013년 1월 30일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상태로 결론을 유보한 채 다음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는 봉쇄조항 비율 조정이다. 하원과 상원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현재의 봉쇄조항 비율은 2005년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거한 것인데, 2013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sup>2</sup> 주요 내용은 하원에서 단일정당의 경우 4%(이탈리아 전체 득표율)와 선거연합 형태의 정당은 10% 이상 획득한다는 1차 조건과 함께 선거연합 소속 정당 득표율이 전국적으로 2% 이상을 획득해야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상원에서는 단일정당의 경우 8%의 전국 득표율과 20% 이상 득표한 선거연합 형태의 정당의 경우 소속 정당

이 3%의 전국 득표율을 갖게 되면 의석을 배분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최대 득표를 한 단일 정당 혹은 선거연합에게 55%에 해당하는 340석을 먼저 할당하고, 나머지 277석을 기타 정당에게 배분하는 다수당 프리미엄 제도를 적용했다. 초기 논의에서는 5%의 비율과 세부적인 사항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의 개정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유권자 수의 변동과 증가 등의 요인으로 5개 주(롬바르디아는 98석에서 101석으로, 라치오는 55석에서 58석으로, 베네토는 49석에서 51석으로, 에밀리아는 43석에서 45석으로, 트렌티노 남토 아디제는 10석에서 11석으로 증가)는 의석수가 1~3석 증가한 반면, 7개 주(캄파니아, 풀리아,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피에몬테, 리구리아, 사르데냐는 1~2석이 감축)는 1~2석이 줄었다.

셋째, 선거법 개정 논의의 쟁점은 강력한 양당제를 통한 연방제와 대통령 직선제의 가능성 여부다. 현재 간선제인 대통령 선거제도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고 불완전한 양당제 시스템을 좌우 선거연합을 통한 양당제를 지향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앞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불명확한 논의와 미확정 등으로 결국 현재 의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의 모습들과 긍정적인 요소들이 대두되었으며, 2013년 총선에서는 시민사회와 기성 정당들이 아닌 수많은 정당과 선거연합체가 탄생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새로운 정치연합체와 정당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몬티 전총리가 만든 “몬티와 함께하는 이탈리아를 위한 시민의 선택(Scelta civica con Monti per l'Italia)”이라는 정당이다. 그리고 녹색당 계열의 정당과 단체들이 모두 모여 “좌파 자유환경당(Sel: Sinistra Ecologia Libert)”을 결

성했고, 반부패와 조직범죄 담당 검사로 유명했던 잉그로이나(Ingroia)가 “시민혁명당(Rivoluzione Civile)”을 결성했다. 그밖에도 한국에 정치풍자 코미디언으로 소개되었던 벵베 그릴로(Beppe Grillo)가 “5개의 별 운동(Movimento 5 stelle)”단체를 만들어 총선에 후보자를 배출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탈리아 특유의 이해관계에 따른 변형주의(transformism)적 전통이 더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총선과는 달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당과 정당연합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 정치권의 쇠퇴와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좌파 연정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1994년 이후 좌·우 연정이 교대로 집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의 승리는 베르사니(Bersani)가 이끄는 민주당(Pd) 주축의 좌파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좌파연합은 현재의 집권 정당이나 정계 복귀를 선언한 베를루스코니에 비해 지지도가 10% 정도 앞서고 있다.<sup>3</sup> 여론조사 기관인 데모스(Demos)에 따르면, 중도 좌파연합은 지지도가 36%이며, 몬티가 이끄는 정당은 12.5%,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현재 집권당인 자유국민당(Pdl)은 19.2%, 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동맹(Lega Nord)은 4.1%에 그쳤다. 이에 반해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 출신의 정당과 정당연합체인 좌파자유환경당은 지지도가 3.2%이고, 시민혁명당 4.2%의 지지도를 획득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5개의 별 운동 선거연합은 무려 12.9%의 지지도를 획득함으로써 제3의 정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몬티의 연합에 우호적인 편이고, 내각의 수반으로서는 베르사니를 가장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 정당 득표율

<sup>1</sup> Ministero Dell' Interno (2012). Legislazione.(<http://www.interno.gov.it/mininterno/site/it/sezioni/servizi/legislazione/elezioni>)(2013.01.30.)

<sup>2</sup> Camera Dei Deputati(2013). Manuale elettorale – Le norme per le elezioni politiche. SERVIZIO STUDI.

<sup>3</sup> Demos & PI (2013). Le Stime Di Voto Delgi Italiani.(<http://www.demos.it/a00808.php>)(2013.01.30.)



## ★ 2013년 총선 관련 여론조사 추이표

(단위: %)

구분	총선 예측			
	2013년 1월 22~28일		2013년 1월 17~22일	
민주당(Pd)	32.8	36.4 베르사니	33.5	38.1 베르사니
좌파자유환경당 (Sel)	3.2		4.0	
기타 중도좌파	0.4		0.6	
몬티와 함께하는 이탈리아를 위한 시민의 선택 (Scelta civica Con Monti per l'Italia)	12.5	17.7 몬티	17.7	16.2 몬티
기독교민주당(Udc)	4.4		3.6	
기타 중도정당	0.8		1.0	
자유국민당(Pdl)	19.2	26.6 베를루스코니	18.1	25.8 베를루스코니
북부동맹 (Lega Nord)	4.1		4.5	
기타 중도좌파	3.3		3.2	
5개의 별 운동 (Movimento 5 Stelle)	12.9	12.9 그릴로	13.0	13.0 그릴로
시민혁명당 (Rivoluzione Civile)	4.2	4.2 잉그로이아	4.5	4.5 잉그로이아
기타 정당	2.2		2.4	
전체	100.0		100.0	

자료: Demos & Pi (2013), Le Stime Di Voto Degli Italiani, (<http://www.demos.it/a00808.php>) Quoted in Sondaggio Demos & Pi, Gennaio 2013 (2013).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13년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한가?

한국의 경우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서 항상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나 국민 의식조사 등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정치협오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최하위를 차지한다. 이는 G8 국가 중 하나이자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환경과 여

## ★ 2011~2012년 국가 기관의 신뢰도 조사

국가 기관	2012	2011	2011~12 변화율(%)
경찰	66.5	71.8	-5.3
대통령	54.6	65.1	-10.5
학교	54.3	55.7	-1.4
성당	44.3	45.0	-0.7
EU	43.5	36.6	+6.9
검찰	39.2	41.6	-2.4
시	37.8	41.8	-4.0
주	24.5	30.7	-6.2
국가	22.4	29.6	-7.2
기업가 협회	20.3	24.0	-3.7
노동총동맹(Cgil)	20.1	27.2	-7.1
노동조합연맹(Cisl-Uil)	14.6	17.7	-3.1
은행	12.8	15.4	-2.6
의회	6.9	8.9	-2.0
정당	5.6	3.9	+1.7

자료: Demos & Pi (2013), Le Stime Di Voto Degli Italiani, (<http://www.demos.it/rapporto.php>) Quoted in Sondaggio Demos per LaRepubblica (2012).

건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이탈리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순서대로 답한 결과를 보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공공질서를 담당하는 공권력 기관(경찰이나 군대 등)이 신뢰도 66.5%로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2011년에 비해 1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4.6%를 얻은 이탈리아 대통령이 차지했다. 그리고 학교와 성당, EU와 검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1년 최하위권을 살펴보면 의회와 정당의 신뢰도가 각각 6.9%와 5.6%로 나타나 정치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13년 총선에서 이탈리아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2013년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렌지 돌풍은 단순히 돌풍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2012년 12월 29일에 있었던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의 현 당수인

베르사니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렌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기존의 정치지도자들과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이탈리아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의 대한 갈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이탈리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주요 인물들 즉, 베를루스코니를 비롯하여 피니(Fini), 마로니(Maroni), 디 피에트로(Di Pietro), 카시니(Casini) 등의 국민적인 지지와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경제위기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이탈리아 국민의 열망과 바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더욱 흥미로워지는 것은 총선과 대선의 해였던 2012년의 한국 상황과 정치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2월 26일이면 모습을 드러낼 이탈리아의 새정치를 기대해본다. ★

김종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EU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 2011~2012년 국가 기관의 신뢰도 조사

정치인	2013년 1월	2012년12월
렌지(Renzi)	64.7(4.4)	61.9
베르사니(Bersani)	48.5(1.8)	50.1
몬티(Monti)	42.5(1.2)	47.3
보니노(Bonino)	38.7(4.8)	38.5
그릴로(Grillo)	35.0(3.2)	28.2
몬테제올로(Montezemolo)	34.3(11.5)	38.3
벤도라(Vendola)	33.6(3.2)	33.4
잉그로이아(Ingroia)	28.8(17.4)	N.R.
마로니(Maroni)	26.6(2.4)	27.3
알파노(Alfano)	25.4(4.1)	30.0
디 피에트로(Di Pietro)	23.4(1.6)	25.5
카시니(Casini)	23.0(2.8)	26.6
피니(Fini)	21.5(2.2)	23.9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20.1(1.1)	20.8

자료: Demos & Pi (2013), Le Stime Di Voto Degli Italiani, (<http://www.demos.it/a00808.php>) Quoted in Sondaggio Demos & Pi, Gennaio 2013 (2013).



# 2013년 한·EU 간 통상 이슈 및 전망<sup>1</sup>

## Korea-EU FTA in 2013: trade issues & prospects

Aft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came into force, it was widely hoped that both economies would strike up an strong trade relationship. However, this prospect has grown dim, as certain industries, which had previously shown dissatisfaction with the FTA, began to express disapproval in the face of increasing economic difficulties. The French government, for instance, formally request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introduce prior surveillance mechanism to the EU-Korea FTA, a first step towards the possibl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s against the imports of Korean cars in Europe. In the face of protracted economic recovery, the EU will be hard pressed to ignore the grievances of domestic industries and member countries and thus there is a good chance that protectionist measures will be strengthened this year. It is true that the EU is aggressively pursuing FTAs with trade partners; but it is, at the same time, improving its own institutional mechanism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keep a close eye on trade regulatory issues under discussion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well as the European Parliament.

### 1.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 20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G20가 가동되었다. 첫 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은 이 위기가 금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빠르게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지 말자는 선언(standstill)을 함과 동시에 국제기구에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WTO, UNCTAD, OECD는 약 6개월 간격으로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2012년 6월 발표된 WTO의 7차 보고서까지는 보호무역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2년 11월 보고서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은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국이 G20 회원국에 국한된다는 점이고, 둘째로 WTO 협정 의무에 위반되는 조치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G20에 포함되지 않은 130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의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고, WTO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제한 조치 역시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다른 주체가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후원하는

### ★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

(단위: 건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무역규제	50	52	24	33	53	44	66	46
국경조치	21	29	22	14	52	36	39	20
수출제한	9	7	5	4	11	19	11	4
기타	0	7	5	3	6	9	8	1
계	80	95	56	54	122	108	124	71

주: 보고서별 분석대상 기간-1차(2009.4~8), 2차(2009.9~2010.2), 3차(1010.3~5), 4차(2010.5~10), 5차(2010.10~2011.4), 6차(2011.5~10), 7차(2011.10~2012.5), 8차(2012.5~10)  
 자료: WTO (2012), Trade Monitoring,(외교통상부 (2012.11.2), "G20 회원국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글로벌 트레이드 앨러트(Global Trade Alert)의 가장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08년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타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는 1,000건이 넘었으며,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까지 포함하면 이는 1,500건에 육박한다.<sup>2</sup>

### 2. 2012년 한국과 EU의 양자 간 무역 동향

한국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2011년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입까지 합친 무역액 기준으로 9위였던 한국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2012년에도 선전했다. 그 결과 오히려 순위가 올라 수출 7위, 무역 8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신흥경제가 한국 수출의 수요를 받쳐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그동안 추진해온 동시다발적 FTA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무역규모와 수치만 놓고 봤을 때 한·EU FTA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EU를 상대로 적게는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200억 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EU 재정위기 속에서도 2011년 FTA 발효를 통해 8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이러한 흑자 기조가 2012년 적자로 반전되었다. 2012년 한국은 EU로 494억 달러를 수출하고, 504억 달러를 수입해 약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물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만으로 한·EU FTA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재 EU의 경기는 회복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조선과 IT 산업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EU로의 선박 수출은 2011년 127억 달러에서 2012년 80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고, 반도체 역시 2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10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2012년 EU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64억 달러 감소했는데, 조선과 반도체 부문에서만 57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약 30억 달러 증가했는데, 자동차 수입이 6억 달러 증가한 것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유(25억 달러)와 석유제품(13억 달러)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반도체는 FTA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EU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의 관세는 2011년 7월 FTA 발효와 함께 철폐되었기 때문에 수입 유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은 EU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EU의 대(對)한국 수출입 증가율과 EU의 역외 주요 무역상대국 수출입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FTA 성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EU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은 17.6%로 러시아(15.9%), 일본(15.2%), 미국(15.0%), 중국(8.1%) 등으로의 수출증가율보다 높았다. 한편, 동 기간 대한민국 수입증가율은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6.7%로 나타났다. 미국(10.1%)을 제외하면, 캐나다(4.2%), 러시아(3.5%)보다 높았고, 중국(-0.2%), 브라질(-3.8%), 대만(-5.3%), 일본(-6.3%), 인도(-7.7%)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양자 간 무역수지만 보면 적자를 기록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여기에는 FTA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 3. FTA 체결 이후의 통상 이슈

FTA 체결로 양자 간에 우호적인 통상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EU FTA 체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일부 산업에서는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U는 한·EU FTA 비준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칙을 제정했는데<sup>3</sup>, 프랑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동 규칙에 있는 사전동향관찰(prior surveillance)의 개시를 요청한 것이다. 2012년 5월 푸조, 르노 등 프랑스 기업의 자동차 판매가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든 데 반해, 한국 기업의 자동차 판매는 큰 폭으로 증가(현대차 7.0%, 기아차 29.8%)해 일견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 기업의 자동차 판매가 수만 대 감소한데 비해, 한국기업의 자동차 판매는 수천 대 증가하는 수준이었고, 여기에는 EU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의 판매 증가가 프랑스 기업에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EU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거절하였다.<sup>4</sup>

<sup>1</sup> 본고는 2013 Asian Pacific Roundtable on the European Union Studies-Foreign and EU Policies of Asia Pacific Countries in the Emerging New Regional Orders(2013.1.29~30, 대만 화롄)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sup>2</sup> 자세한 내용은 조성대 외 (2013), "세계 경기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IT Trade Focus』, 12(2). 참조

<sup>3</sup> 조성대 (2010), "한·EU FTA 체결에 따른 EU의 양자 세이프가드 규칙 제정 동향," 『EU Brief』, 2(5).

<sup>4</sup> 조성대 (2012),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사전동향관찰 개시," 『EU Brief』, 4(5).





이러한 상황에서 EU와 중국 간에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EU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건의 반덤핑 조치와 1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과 11월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관련 부품에 대해 각각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 제품은 중국의 대EU 수출에서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조치가 취해진다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EU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sup>5</sup>

EU와 중국 간 통상마찰은 양자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소지가 크다.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불만도 커지고 있고, EU로서는 이러한 국내 산업과 회원국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4. 2013년, 초대형 지역무역협정 추진 속 EU의 공세적

##### 통상정책 추진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증가는 최근 수년간 매우 뚜렷한 현상이다. 특히 2012년부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2013년 말까지 동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미국과 EU는 양자 간 FTA<sup>6</sup>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FTA 논의는 십년 넘게 진행되어왔고, 양자 간 관세 수준이 높지 않은 가운데 비관세장벽, 국내 규제 등의 매우 복잡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새롭거나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EU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sup>7</sup>하기 전까지만 해도 WTO DDA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EU FTA를 체결한 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sup>8</sup>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데 이어 미국과도 FTA 협상을 개시했다.

둘째, 양측은 2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과 EU 간에는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다양한 규제 이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히며 이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 EU집행위 임기가 2015년 종료된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러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이는 국제통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 EU라는 초대형 시장이 FTA로 더 많이 개방된다는 것보다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거나 최소한 상호 기준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여 무역이 보다 자유화될 경우, 이는 미국과 EU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동차, 완구, 식품에 대해 양자 간의 상이한 규제가 하나로 통일되거나 어느 한쪽의 기준만 충족시켜도 다른 쪽 시장로의 진입이 자유롭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EU는 FTA 체결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제통상규범의 집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역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EU는 WTO와 같은 다자조약이나 FTA와 같은 양자조약에서 다른 국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승소하거나, 다른 국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동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 해도 매번 별도의 대응조치를 승인받고 집행해야 했다.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불확실성도 커졌다. EU집행위가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새롭게 제안한 제도에는 이러한 대응조치를 단일한 규칙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sup>

이 제안은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된 EU 내 기관 간 역할 구도와 제도의 효율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복수의 FTA 추진과 더불어 통상정책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이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와 EU집행위 간에 논의하는 내용과 규칙의 집행을 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sup>5</sup> 조성대 (2012).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EU."『EU Brief』, 4(6).

<sup>6</sup> 공식 명칭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정으로 명명되었다(USTR (2013.2.14.). U.S., EU Announce Decision to Launch Negotiations on 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Press Release.)

<sup>7</sup> 당시 EU는 이전까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히며, 한국, 인도,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sup>8</sup> 김득갑 (2012). "EU집행위, 경제위기 돌파구로 FTA협상을 적극 추진."『EU Brief』, 4(4).

<sup>9</sup> European Commission (201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2012/0359(COD)).







# 유럽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 현황과 규제 논의

### Europe's shadow banking: current status and regulations

The issue of shadow banking was one of the main financial topics discussed during the 2010 G20 Seoul Summit. The G20 leaders requested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develop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oversight and regulation of shadow banking system, to which the latter duly complied and produced a report. When it comes to the road map for financial reform, the EU has been taking the lead in executing the G20 agenda. The EU's reform bills, a sizeable proportion of which are in the process of legalization, are designed to implement mechanisms to properly regulate the financial system, institutions and the EU marke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ssue of prudential regulation and shadow banking (the latter was hitherto considered unimportant) are increasingly carrying more weights in the European financial market. In this context, the European Commission is looking into the shadow banking entities and activities.

#### 1. 그림자 금융 관련 규제 논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는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주목받았던 금융규제 이슈 중의 하나다. 당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SB는 2011년 10월에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1년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슈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권고안을 발전시키고자 5개의 세부 워킹그룹<sup>1</sup>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금융개혁을 위한 로드맵에 비추어볼 때 EU는 G20 의제를 수행하는 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가 법제화 과정에 있는 EU의 개혁안은 유럽 내 금융시스템, 금융기관 및 시장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와

감독의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던 그림자 금융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U집행위는 그림자 금융의 기구 및 활동(shadow banking entities and activities)에 관한 규제와 이슈를 조사하고 있다<sup>2</sup>.

본 보고서에서는 FSB가 제시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의와 기능, 잠재적인 위험을 논의하고, 최근 유럽에서의 그림자 금융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그린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그림자 금융과 관련한 유럽의 규제 및 조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그림자 금융의 정의 및 잠재적인 위험

FSB는 2011년 10월 보고서에서 그림자 금융시스템을 “전통적인 은행시스템 밖의 기구와 활동 등이 연관된 신용중개 시스템(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림자 금융의 기구는 1) 예금과 같은 성격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2) 만기 및 유동성을 변환하거나, 3) 신용 위험이 전이되는 활동을 하거나, 4) 직·간접적인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은행시스템 밖의 기구

<sup>1</sup> 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은행과 그림자 금융 기구 간 교류에 대한 규제방안 구축을, ②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MMFs 등의 대량 인출사태에 따른 시스템 위험에 대한 완화방안과 ③ BCBS와의 협조를 통해서 현재의 증권화(securitisation) 요건에 대한 평가와 정책권고안 마련을, ④~⑤ 2개의 FSB 하위그룹은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및 repo에 관한 권고안을 2012년 내에 완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up>2</sup> 지난 2011년 11월 EU집행위는 그린보고서(green report)를 통해 유럽 내 그림자 금융 이슈에 대해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ABCP conduits, SIV(Special Investment Vehicles), SPV(Special Purpose Vehicles) 등과 같은 증권화 기구, MMFs를 비롯하여 예금 성격의 펀드와 금융상품들, 레버리지된 ETFs(Exchange Traded Funds),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만기 또는 유동성을 변환하거나 신용 또는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신용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림자 금융의 활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증권화, 증권대차 및 repo 거래 등이 포함된다.

그림자 금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내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투자자들에게 은행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향상된 전문화를 통해서 특별한 수요(specific needs)에 맞춘 중개서비스를 수행한다. 셋째, 은행이나 자본시장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를 위한 대안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여러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중 일부는 시스템 위험의 요인이 된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은행과 연관성이 높은 그림자 금융이 본질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증권과 펀드시장에서 여러 국가의 규제와 금융시스템 내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의 잠재적인 위험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 성격을 지닌 그림자 금융은 고객들의 갑작스런 대규모 인출사태에 취약한 단기성 자금으로서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 활동은 은행에 대한 규제나 감독과 같은 엄격한 규제 의 틀 밖에 있다. 둘째, 그림자 금융은 여러 번 회전된 담보차입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게 형성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 위험의 원천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거의 없다. 셋째,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신용중개 과정에서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 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자이크식 규제(regulatory fragmentation)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으로 규제 차원의 위험을 유발한다. 즉, 은행과 다른 여러 금융기관들은 그림자 금융 기구를 모방하거나 연결재무제표 밖의 기구를 통해서 운영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금융활동은 은행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의 붕괴는 위험의 전이와 외부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테면, 그림자 금융기관 붕괴 시 금융 및 실물자산의 무차별한 매도에 따른 자산가격의 충격뿐 아니라, 이들에 의한 은행시스템으로부터의 차입과 조건부 부채(contingent liabilities: credit enhancements and liquidity lines) 등이 위험전이의 경로가 된다.

#### 3. 최근 유럽의 그림자 금융 현황

2012년 ECB가 보고서에서 밝힌 자료를 기초로 유럽의 그림자 금융을 증권화, MMF, repo 등으로 나누어 미국과 비교해보고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유럽의 그림자 금융 현황을 파악해보겠다.

신용중개의 과정을 분할하고 자산의 만기 및 유동성을 전환하는 증권화 과정은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활동이다. 유럽 내 증권화 부문의 규모는 2007년 기준 5,000억 유로에 근접하였고 미국은 약 1조 7,000억 달러에 달했다. 2009년 기준으로는 유럽이 약 4,500억 유로였으나 미국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럽시장의 증권화 부문은 미국보다는 절대 규모 면에서 여전히 작았으나 미국과 달리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MF의 경우, 2008년에 유럽과 미국의 시장규모는 각각 1조 3,000억 유로와 2조 8,000억 유로로 둘 간의 격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시장 규모가 1조 8,000억 유로로 하락해 1조 1,000억 유로였던 유럽 시장과의 격차가 감소하였다.





한편, FRB에 보고된 자료에 기초한 미국 내 repo 시장 규모는 2008년에 2조 9,000억 유로로 나타났으나, 시장에서는 6조 4,000억 유로를 초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추정치가 없는 유럽의 경우, 시장에서는 2011년 말 기준 repo 시장 규모가 6조 2,000억 유로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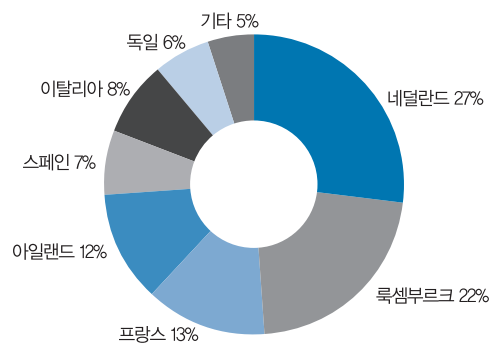
#### ★ 유럽 금융기관의 유형별 자산 규모와 비중

구분	2007Q2		2011Q2	
	1조 Euro	% 전체	1조 Euro	% 전체
은행	25.6	54.0	28.0	51.5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8.5	17.9	10.8	19.9
머니마켓펀드(MMFs)	1.2	2.5	1.1	2.0
금융기구조사(FVCs)	-	-	2.2	4.1
기타 금융기관	7.3	15.4	7.6	13.9
유로시스템	1.6	3.5	3.1	5.8
MMF와 다른 투자펀드	5.5	11.6	5.6	10.3
헤지펀드	-	-	0.1	0.2
보험 및 연금	6.1	13.0	6.8	12.6
금융기관 총자산	47.3	100.0	54.4	100.0

자료: Bak-Simon, et al. (2012). Shadow banking in the euro area: an overview. Occasional Paper Series, 133.

미국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는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20조 달러와 15조 달러로 전통적인 은행 부문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유럽의 경우 미국과 같은 세부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할 수 없지만, 유럽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는 OFIs(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sup>4</sup>와 MMFs를 포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up>5</sup> 유럽의 금융기관 유형별로 자산 규모와 그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유럽의 은

#### ★ 유럽 내 국가별 그림자 금융 자산의 비중



자료: Bak-Simon, et al. (2012). Shadow banking in the euro area: an overview. Occasional Paper Series, 133.

행과 그림자 금융의 자산규모가 각각 28조 유로와 10조 8,000억 유로로, 은행과 그림자 금융을 합한 자산에서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 시기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약 53%였던 미국과 비교하면 유럽의 그림자 금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 금융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미국과 달리 유럽은 안정적이었다.

유럽 전체 국가의 그림자 금융 자산에서 개별 국가의 그림자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특히 경제 규모를 고려해볼 때 룩셈부르크(22%), 아일랜드(12%) 그리고 네덜란드(27%)가 유럽 내 그림자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 최근 유럽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및 조치사항

##### (가) 은행 및 보험 규제를 통한 그림자 금융의 간접 규제

2009년에 개정된 EU의 자본요건지침(CRD II: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II)은 유동화자산(securitized asset)의 보유자(originator)와 설립인(sponsor) 모두가 자신들이 인수한 위험자산의 상당부분을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CRD II는 증권화 기구에 대한 신용공여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도 요건을 강화하였다. 2010년에 개정된 자본요건지침(CRD III)은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안에 맞추어 자본요구량에 대한 규제를 높였다. 2011년 12월 이후, 복잡한 재유동화(resecuritisations)에 투자한 은행은 추가적인 공시의무와 함께 재유동화 투자 위험에 대한 자본요구량도 크게 확대했다. EU집행위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수정안을 승인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양도(IFRS 7)와 관련한 공시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증권화 상품에 투자하는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관련해서는 지급여력지침(Solvency II: Solvency II Framework Directive)하에 은행규제와 마찬가지로 증권화 상품의 보유자와 설립인 모두에게 자신들이 인수한 위험자산의 일부를 보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 확대

EU집행위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에 관한 리뷰를 통해 2011년 재정비된 지침과 규제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MiFID에 적용을 받고 있는 투자회사를 고려한 것으로서, 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소 해소하고 미래의 규제 차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현존하는 건전성 규제의 영역을 새로운 금융기관이나 활동의 일부까지 확대한 조치였다. 한편, MiFID는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CRD를 통해서 그림자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 (다) 일부 그림자 금융 활동에 대한 직접 규제

EU집행위는 일부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 개정된 대체투자 펀드매니저에 관한 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그림자 금융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UCITS IV: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에서는 MMFs와 ETFs와 관련된 내용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2011년 7월 발효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켰다.

신용평가기관(CRAs: Credit Rating Agencies)은 레버리지가 없고 만기전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금융상품이나 기관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있어 신용증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SMA는 2009년에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규제하에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엄정한 규제와 감독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EU집행위는 2011년에 신용평가 과정을 강화하는 법률적인 규제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 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 Solvency II는 엄정한 위험관리와 함께 포괄적인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그림자 금융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Solvency II는 CRD IV와 같이 신용위험에 대해서 엄격한 자본요구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국들이 보험사 SPV에 대해서 인가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up>3</sup> Pazsar, et al. (2010). Shadow Banking,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July.

<sup>4</sup> OFIs는 은행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MFIs(Monetary Financial Institutions)과 ICPFs(Insurance Corporations and Pension Funds)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하며, MMFs는 MFIs에 포함되어 있다.

<sup>5</sup> Bak-Simon, et al. (2012). Shadow banking in the euro area: an overview. Occasional Paper Series, 133.







#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 EU Common trade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Korea-EU FTA

Treaty of Lisbon came into force in December 2009 and clearly distinguished the rights and authorities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into 3 categories: the inherent rights of individual members, the exclusive rights of the EU, and the common rights of both parties. As a consequence, common trade policies, over which the EU exercises the exclusive rights, do not need to be ratified by all the member states. There is a caveat however: unanimous approval of the member states is required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service & intellectual propriety rights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drawing up FDI related agreements. Therefore, even the Korea-EU FTA has been provisionally in force since 1 July 2011; the provisions of the FTA relating to the criminal enforcement of IPRs and certain provisions of the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are yet to be ratified by all 27 member states.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at the subject of FDI, which,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should fall under the competence of member states has been included as that of the EU. This means that, in case of conflicts from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Korea, deciding which entity would act as the principal agent of negotiation may prove to be problematic and possibly cause controversy.

### 1. EU 공동통상정책과 통상협상 주체의 문제

EU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27개 회원국이 공동의 통상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즉, EU 27개 회원국들은 통상에 관한 대외적 권한이 없으며, 협의를 거쳐 EU가 한목소리로 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EU가 법인격을 갖게 되었으며, 잠정 적용되고 있는 한-EU FTA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으나, 실재는 ‘한국과 EU 및 그 회원국과의 FTA’ 다. 이는 공동통상정책의 관할 범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U 공동통상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 기관은 다자 및 양자 간 협상에서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EU집행위다.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민주주의 제고 및 정치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통상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정의하는 조치의 입법에는 일반입법 절차를 적용하고,<sup>1</sup> 국제통상협상 분야에서 제207조 위

원회 외에도 유럽의회에 정기보고를 할 것<sup>2</sup>, 그리고 통상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유럽의회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207조 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와 같은 강력한 협상 관여 권한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정치적인 논리로 통상 이슈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전문성이나 윤리규정은 미비하여 EU 업계에서는 유럽의회를 타깃으로 로비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국내 정치적 요구가 자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EU집행위는 대외협상 과정에서 위원회의 지지를 획득한 타협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반대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sup>2</sup> TFEU 제207조 3항(Where agreements with one or more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need to be negotiated and concluded, Article 218 shall apply,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this Article)

<sup>3</sup> TFEU 제218조 6항 (a)(v)(agreements covering fields to which either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pplies, or the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where consent by the European Parliament is required)

<sup>4</sup> Domopoulos, A. (2010). The Effect of the Lisbon Treaty on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5.

### 2. 리스본조약 채택으로 EU 협상 권한이 확대

공동통상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배타성에 있다.<sup>5</sup> 귀속의 원칙은 EU 조약의 체제 및 범위 내에서 본래 회원국에 속한 권한을 공동체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한의 배분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 공동체의 권한이 증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동통상정책의 관할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리스본조약은 이처럼 불명확했던 EU와 회원국의 권한을 회원국 고유권한, EU의 배타적 권한, EU와 회원국 간 공유권한으로 구분함으로써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 결과 공동통상정책과 같이 EU가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더 이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공동통상정책의 원칙들도 확정되었다. 니스조약과 비교했을 때 EU의 배타적 권한은 과거 회원국들과의 공유권한이었던 해외직접투자,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의 무역과 관련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sup>6</sup>

더욱이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규제적 진보적 폐지, 해외직접투자, 관세인하 및 다양한 무역장벽의 제고 등 관세동맹의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었다. 또한 배타적 권한은 무역과 관련된 환경기준, 노동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동통상정책하의 자율적 국내 결정권한이 상당부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변경되었다.<sup>7</sup> 다만 서비스 · 지식재산권의 보호 · 해외직접 투자 관련 협정 중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내부조치가 수반되는 국제협상,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EU 문화적 · 언어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협상, 사회 · 교

<sup>5</sup> Cremona, M. (2002). The External Dimension of the Single Market: Building (on) the Foundations. Catherine Barnard and Joannes Scott(eds), *The Law of the Single European Market-Unpacking the Premises*. Hart Publishing, p. 374.

<sup>6</sup> 박덕영 외 (2012). 'EU법강의 개정판', 박영사.

<sup>7</sup> 과거 EU 공동통상정책의 관할 범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EU의 WTO 가입 관련 ECJ 판결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Tamio Nakamura, Takao Suami 저(2012). 'EU법 기본판례집'(박덕영, 이주운 역).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pp. 338~344. 참조.

육 · 보건 서비스 분야의 회원국 국가 서비스 제공능력과 책임을 위협하는 협상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요건이 부가되었다.<sup>8</sup>

### 3. 한-EU FTA의 잠정적 적용과 EU의 배타적 권한 범위의 관계

EU와 회원국의 권한 관계는 항상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조약 내에 EU의 권한과 회원국의 권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조약을 혼합협정이라고 하는데, 한-EU FTA도 혼합협정에 해당한다. 한-EU FTA가 비록 지역무역협정일지라도 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무역 전반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sup>9</sup>

대부분의 국민은 한-EU FTA가 발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잠정 적용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정식으로 발효한 것은 아니다. 이는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EU FTA는 동 협정 제 15.1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한국의 비준과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잠정적으로 (provisionally) 적용개시가 된 상태다. EU와 EU 회원국의 공동권한 분야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의 형사집행

<sup>8</sup> TFEU 제207조 4항(For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council shall act by a qualified majority. For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in the fields of trade in services and the commerci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where such agreements include provisions for which unanimity is required for the adoption of internal rules. The Council shall also act unanimously for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a) in the field of trade in cultural and audiovisual services, where these agreements risk prejudicing the Union's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b) in the field of trade in social,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where these agreements risk seriously disturbing the national organisation of such services and prejudicing the 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to deliver them).

<sup>9</sup> Pollet-Fort, A. (2011). The EU-Korea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Singapore FTA. EU Centre in Singapore Background Brief, 4(14).







#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국적 획득에 대한 소고

## On Gerard Depardieu gaining the Russian citizenship

One of the most surprising events in the beginning of 2013 was that Gerard Depardieu, a famous French actor, was granted the Russian citizenship. The actor received his Russian Passport after meeting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called Russia 'a great democracy. This event amplified the already acute conflict between the western countries and Russia, which has recently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direct confrontation. However, it is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is event was a case of political propaganda. Instead,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by-product of the inevitable tension between Russia which is keen to make its mark in the arena of global free market and democracy and the western countries which have to keep in check and accommodate the former.

###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선택과 유럽의 자존심

2013년 연초를 떠들썩하게 만든 외신 중 하나가 세계적 인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 국적을 획득했다는 소식이다.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이 사건은 그가 오래 전부터 자신은 '세계 시민' 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특히 평소 꾸준히 러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드파르디외는 20대 초반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통해 말더듬이병을 극복했고 이후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등 러시아 문학에 심취했다. 게다가 2011년에는 영화에서 제정 러시아 말의 유명한 과승 '라스푸틴'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구소련 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후계자인 큰 딸 굴나라 카리모바와 공동으로 음반을 발표했고, 곧 그녀가 만든 중앙아시아 역사 영화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산이 없는 러시아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불 수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영혼이 자유로운 곳인데 프랑스 변방에 위치한 자신의 고향도 똑같은 지형이라 러시아와 영혼의 교감을 느낀다.' 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러시아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국적 획득에 전 세계, 특히 서방국가들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무엇보다 서방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감, 즉 자존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75% 부자세 입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이후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많은 프랑스의 유명인들은 부자세를 피하여 벨기에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따라서 뒤늦은 드파르디외의 국적 포기 선언은 톱뉴스가 되기에는 좀 약해 보인다. 드파르디외가 국적 포기를 선언하자 프랑스 총리 장 마르크 에로가 그를 '조라한(shabby) 인간' 이라고 비아냥거린 것은 프랑스에서 이 배우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총리의 발언에 심히 자존심이 상한 배우가 그에게 러시아 국적을 제안한 푸틴의 손을 덥석 잡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서방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드파르디외와 푸틴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 그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왜 하필 러시아냐' 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존심이 상한 드파르디외가 똑같은 방식으로 프랑스 정부, 나아가 서방 전체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뉴욕 타임스』 등 많은 서방의 언론이 지적하듯 러시아의 오랜 반(反)서방전략과 우연히 혹은 고의적으로 합치하는 것이다. 항상 러시아를 문화적 · 정치적 하등국가로 취급하던 서구 국가들의 하대에 절치부심하던 러시아 정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유럽의 정치적 · 문화적 엘리트들을 러시아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이 엘리트들의 입을 통해 유럽을 능가하는 문화적 · 정치적 자긍심을 만천하에 공표하곤 했다.

관련 규정 일부 및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은 EU 회원국 모두가 비준해야 발효된다. 모든 EU 회원국에게 공동권한 분야에 대한 비준을 얻기 전에 그 나머지 조약의 효력을 미리 발생시킨 경우는 이미 EU-칠레 FTA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sup>10</sup> 정식발효는 동 협정 제 15.10조 2항<sup>11</sup>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제로 지적재산권의 행사집행 관련 규정 일부 및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에 대한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 4. EU의 권한 확대와 투자보호의 문제

리스본조약은 그동안 개별 회원국의 소관사항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켰다.<sup>12</sup> 이로써 회원국들은 더 이상 제3국과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EU 법률에 따라 국제협정을 채택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은 '투자자유화' 만이 EU의 배타적 권한이며, '투자보장' 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집행위 및 일부 회원국들은 '포괄적 투자규범(comprehensive investment rules)'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는 2010년 7월 7일 <Toward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라는 보고서와 회원국이 이미 체결

한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대한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EU는 EU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투자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EU 차원의 투자협정 협상권한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셋째, 기존의 BIT는 존속하나 이를 재협상하여 EU 법에 합치되게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예외적인 잠정조치로서 현재 진행 중인 BIT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 다섯째, 회원국들이 투자 관련 분쟁에 연루될 경우 이를 EU집행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EU집행위는 해당 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sup>14</sup>

이에 따라 한국이 한-EU FTA를 협상할 당시에는 투자보호에 관한 사항이 회원국의 관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투자 분야 역시 EU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속하게 되어 앞으로 기존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가 해결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EU 간에 투자보호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과 EU의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EU와 협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결정을 할 시에는 기존 개별 회원국과 체결한 BIT와의 정합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10</sup>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2012).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한·EU FTA 상세설명자료』(pp.162). 외교통상부.

<sup>11</sup> 한-EU FTA 제15.10조 2항(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sup>12</sup> TFEU 제207조 1항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based on uniform principl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hanges in tariff rates, the conclusion of tariff and trade agreement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the commerci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achievement of uniformity in measures of liberalisation, export policy and measures to protect trade such as those to be taken in the event of dumping or subsidies.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Union's external action)

<sup>13</sup> European Commission (2010). 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COM(2010)343-final).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1/may/tradoc\_147884.pdf> (2012. 5. 30.)

<sup>14</sup> 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 An Interview with Tomas Baert,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trade, services and investment. (2010.9.23.). Investment Treaty News. < http://www.iisd.org/itn/>(2012.5.30.)

안이 만들어지고, 야권 성향의 언론은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외국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푸틴의 비난에 직면했다. 대규모 집회 등 야권의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러 미국대사는 외교적 관례를 깨고 노골적으로 푸틴 정부의 야권 탄압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쟁점: 푸시라이엇과 마그니츠키 법

이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쟁점은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민주주의 지지발언’에 대한 서방 측의 민감한 반응을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든다. 먼저 러시아 대선 과정에서 푸틴에 반대하는 기습공연을 벌인 여성 펑크 그룹 푸시라이엇(Pussy Riot)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그룹은 러시아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2012년 2월 러시아정교의 주교회인 모스크바 구세주 성당 제단에 올라가 〈성모 마리아여 푸틴을 내쫓으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다 구속되었다.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여성’과 ‘예술의 자유’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걸린 이 사안에 대해 서방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런데 결국 이 그룹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서방의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석방 탄원이 줄을 이었다. 마돈나를 비롯하여 영국가수 스팅, 미국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영화 〈어둠 속의 댄서〉로 알려진 팝스타 비요크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지난 2012년 8월 30일 프랑스의 국민가수인 미레이 마티에가 모스크바 공연 전에 한 인터뷰에서 푸시라이엇의 행위를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다가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의 못매에 시달린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잘 반증하고 있다.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국적 획득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코끼리 안락사 문제로 러시아 국적 획득 의사를 밝힌 브리짓 바르도와 함께 제라르 드파르디외, 미레이 마티에를 함께 묶어서 푸시라이엇과 바꾸자는 제안이 있을 정도였다. 또한 이 그룹에게 프랑스 명예시민 훈장을 수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미국에서 2012년 12월 14일 정식으로 발효된 「마그니츠키법(Magnitsky Law)」과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에서 2013년 1월 1일 발효된 이른바 「디마 야코블레프법(Dima Yakovlev Law)」의 대결이다. 실효법 차원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양자 간의 대결 국면이지만 EU에서도 「마그니츠키법」과 동일한 법이 비강제적 성격이지만 이미 2010년 12월에 발효된 상태라 실제로는 서방 전체와 러시아의 대결 국면이 정식으로 입법화된 살벌한 형국이다. 먼저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 정부 관료들의 조직적인 위법과 탈세를 고발한 회계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구속되어 2009년에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연유한다.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국세청 관료들이 탈세를 빌미로 압수한 서류와 도장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을 자기 회사로 재등록하는 불법으로 무려 54억 루블의 국세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피고발자들 대신에 고발자인 자신이 구속된 사건이다. 결국 2009년 11월 마그니츠키가 부당한 감금과 치료 거부 상황에서 사망하자 EU가 먼저 60명의 관련 러시아 관료들의 명단, 이른바 「마그니츠키 명단」을 만들어 이들의 EU 입국 금지와 은행계좌 압수를 권고하는 법을 2010년 말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2011년 말 비록 유럽보다 1년 늦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입국 금지와 은행계좌 압수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마그니츠키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행했지만 결국 해당 관료들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그쳤고 서방의 「마그니츠키법」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법적 강제성을 명시한 미국정부를 겨냥하여 러시아인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의 관련자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키고 은행계좌를 압수함과 동시에 러시아 아동 입양도 전면 금지시키는 「디마 야코블레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8년 7월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생후 21개월의 러시아 입양아 디마 야코블레프가 32도의 무더위에 9시간이나 승용차 안에 갇혀 있다가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

#### 서방 엘리트를 환대하는 러시아의 오랜 전통

혁명과 반혁명의 급격한 부침에 시달린 프랑스의 엘리트들은 러시아 정부의 단골손님 1호였다. 제정 러시아의 전성기를 이루어내었던 18세기 캐서린 여제는 당시 유럽 최고의 엘리트였던 계몽철학자 디드로를 초청했다. 계몽군주제를 주창하던 디드로의 1773년 당시 상황은 프랑스 정부와의 갈등과 경제적 문제가 겹쳤다는 점에서 지금의 드파르디외와 상황이 비슷했다. 자연과 이성

의 법칙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던 계몽주의자와 혁명 전야의 프랑스 왕정의 갈등은 불가피했고, 정부의 압력과 통제로 인해 디드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캐서린 여제는 구원의 여신처럼 등장해 그를 파산에서 구해냈다. 디드로의 개인 서가를 구입하되 서가는 디드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추가로 관리비까지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1773년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간 디드로는 여제를 ‘클레오파트라

의 매력과 시저의 영혼이 함께 구현된 존재’라고 극찬했다. 당대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전제군주 중 한 명이었던 캐서린 여제는 나중에 ‘디드로의 말을 따랐다면 내 제국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하여간 디드로를 통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본 것은 틀림없다.

#### 증폭되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

드파르디외의 행동 중에서 프랑스 및 서방세계의 자존심을 가장 자극한 것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여권을 직접, 마치 옛 러시아 군주들의 예를 그대로 재현하듯이 받는 과정에서 그가 언론에 내뱉은 말들이다. 드파르디외는 ‘나는 푸틴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정도의 개인적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러시아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다’, ‘러시아의 야권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등 현재 푸틴 정부를 둘러싸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 야권 및 서방 세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최근 직접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방 측과 러시아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 푸틴 집권 직후에도 서방은 푸틴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 인권 탄압적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으나 이렇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마찰 수준은 아니었다.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의 회장인 호도르코프스키의 구속은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도덕성 문제가, 체첸 침공의 경우는 미국의 9·11사태 이후 국제적인 반테러리즘 연대가 문제를 어느 정도 중화시켜주었다. 그러나 2012년 푸틴의 재집권 이후 서방과 푸틴 정부의 대결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 총선과 2012년 3월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와 대규모 반푸틴 집회가 이어지자 푸틴 정부는 주동자들의 배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의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민간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



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기는 싫고 러시아보다는 벨기에를 더 선호하는 이 높고 변덕스러운 배우가 벨기에 국적을 얻기 위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거대 해석하여 새로운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글로벌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오려는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면서도 수용해야 하는 서방 간의 불가피한 갈등에서 파생된 에피소드로 감싸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극단적 대결보다는 갈등 완화를 지향할 필요

비록 러시아의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전면적인 반민주주의 국가로 치부하는 것 또한 일종의 허위 프로파간다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의 혼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은 스스로 푸틴에게 강력한 통수권을 부여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혼돈의 시대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제 나름대로 개혁과 개방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측근 부패 일소, WTO 가입,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복귀 등 비록 한계는 있지만 세계 시장 그리고 법치주의를 향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드파르디외가 75%의 세금을 피해 러시아로 귀화하는 이유 중 하나인 러시아의 13% 세율 또한 약 20년간 러시아 정부가 꾸준히 진행해온 세제 개혁의 결과다. 참고로 러시아도 사치품에 대한 특별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고가 자동차와 1,0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규모도 1%에 불과하다. 또한 러시아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마그니츠키법」이 발효되는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디마 야코블레프법」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취업 및 고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이 지나친 흑백 논리로 러시아를 압박할 경우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러시아의 경제적·외교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주범이자 최대 피해자인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시점에서는 지나친 이분법적 외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소수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집권당의 부패, 은행들의 리보금리 조작 등 러시아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이 타국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하는 것도 자기당착이다. 사실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국적 획득은 일종의 해프

다. 이 사건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에 대해 세계에서 러시아 고아를 가장 많이 입양하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19명의 러시아 아이들이 양부모에게 살해당한 미국이야말로 러시아인들에게는 인권 사각지대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2013년 초 「디마 야코블레프법」이 발효되자 러시아 야권과 서방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한다며 거센 역공을 퍼붓고 있으며, 대결 양상이 전면전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 드파르디외는 프로파간다의 희생물?

이 와중에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푸틴에게 러시아 여권을 하사받고 러시아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극찬한 것은 마치 공격대기 중인 벌집을 찌서놓은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치를 소치에서 여권을 받고, 2018년 월드컵 준비가 한창인 모르도비아 공화국의 수도 사란스크에서 러시아 전통복장을 입고 러시아 여인들과 러시아 춤과 노래를 즐긴 후 아파트 열쇠를 선사받은 뒤 FIFA에서 모르도비아 공화국의 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드파르디외의 행보는 마치 한 편의 러시아 홍보 영화를 연상하게 했다. 모르도비아공화국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 당시 푸틴의 러시아 전체 득표율 63.6%를 훨씬 뛰어넘는 87.06%의 친푸틴 성향을 보인 지역이며, 친푸틴계 인사인 이곳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월드컵 관련 인프라 건설 수주를 집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서방의 입장에서는 드파르디외가 마치 러시아의 보드카에 취해 푸틴의 꼭두각시 노릇에 흠뻑 빠진 듯해 보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반민주주의 국가라는 공식을 확고히 한 서방 측에게 드파르디외는 러시아 정부의 거짓 프로파간다의 희생물에 불과하다. ‘푸시라이엇’, 「마그니츠키법」과 「디마 야코블레프법」의 대결에 이은 러시아의 드파르디외 카드에 서방 측이 또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럽 경제의 성장

## Investing in growth: Europe's next challenge

Behind Europe's growth stagnation is an unprecedented weakness in private investment. European companies and households have been buffeted by the global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of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he fall in private investment between 2007 and 2011 was larger than any previous decline in absolute terms and four times the decrease in real GDP over the same period. History tells us that advanced economies take an average of five years to recover from such a drop in private investment. By that standard, the 27 economies that make up the European Union are, on average, running behind schedule. Yet Europe's policy debate has focused more on how to balance public budgets than how to reignite growth. When governments do discuss growth, the emphasis has tended to be on increased government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rather than private 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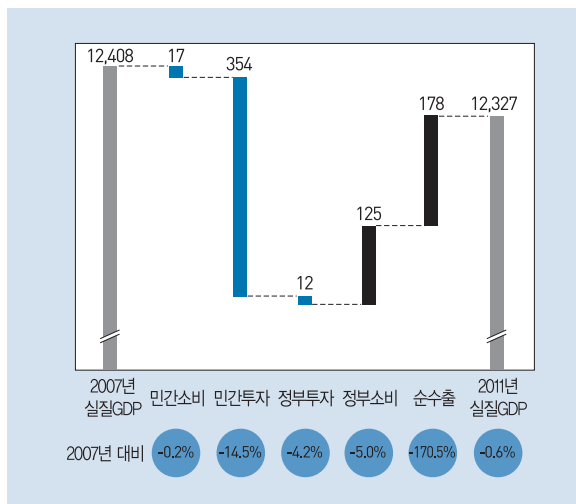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McKinsey)가 유럽 경제침체의 배경에는 극심하게 침체된 민간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이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보고서는 '민간투자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다. GDP 구성요소 중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민간투자였다. 최근 EU 27개국의 평균 민간투자는 2007년 규모의 15%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40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주목할 점은 EU 27개국의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투자의 총 감소액 3,840억 유로 가운데 민간투자의 비중이 92%로 GDP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즉, 민간투자가 현재 유럽이 직면한 경기침체와 성장정체에 지배적인 역할을 했고,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럽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의 위기에서 GDP 성장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은 민간투자라고 강조한다. 나머지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정부투자과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은 현재 유럽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경기가 축소되었다가 GDP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면 민간소비의

### ★ EU 27개국의 GDP 구성요소 변화



자료: IHS Global Insigh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12.), Investing in growth: Europe's next challenge.에서 재인용)

실질GDP 성장기여도는 3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경제전망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고, 위기 이전부터 쌓인 막대한 가계부채는 상황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IMF도 EU 27개국의 정부지출이 2011년 48.4%에서 2017년 45.5%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정부투자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민간투자의 자리를 대신하려면 정부의 1년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정책에 큰 반전

이 없는 한 정부투자와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순수출은 유럽의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EU 27개국 순수출의 평균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는 3분의 2에 달한다. 그러나 EU 27개국의 총수출 가운데 60%를 역내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요 수출시장은 최근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수출로 성장을 도모하기가 벅찬 상황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민간투자가 다른 GDP 구성요소들보다 제약이 많지 않으며, 비금융 법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비금융 법인들은 약 7,500억 유로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07~2011년 동안 감소한 총 민간투자의 약 2배 규모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고서에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시경제 장벽(microeconomic barriers) 제거를 목표로 한 '미시경제 행동주의(microeconomic activism)'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정책입안자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중점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인지, 장기간의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등의 잠재력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우선 선정된 산업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EU의 역내 에너지망

(European-wide energy grid)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사항, 대형마트의 확산을 규제하는 정책 등이 있다. 셋째,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정책에 대한 엄격한 손익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기관은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이 충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자는 선택된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기업들의 경우, 생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위험회피 결정은 피하고, 둘째, 미시적 관점에서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시장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프로젝트 전담팀을 마련하는 등 효과가 증명된 지렛대(lever)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정리하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으로써 유럽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유럽은 성장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재정긴축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온 힘을 쏟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이제 유럽은 다시 성장을 말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2, 12.), Investing in growth: Europe's next challenge.)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제17회 브뤼셀 포럼 The 17<sup>th</sup> Brussels Forum

The 17<sup>th</sup> Brussels Forum on “European Experience in Dealing with Violent Crime”, organised by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Yonsei-SERI EU Centre was held on January 21<sup>st</sup> at Emerald Hall, Lotte Hotel Seoul. The event was supported by the German, Italian, British, and French embassies. From Europe, Mr. Jean Phillipe Rivaud, Deputy General Prosecutor from the court of appeals in Amiens, Dr. Dirk Van Zyl Smit from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and Dr. Reingard Nisse from Fachhochschule der polizei des Landes Brandenburg, were invited. Attending this forum were experts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Suprem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University, Civil Society groups, and a number of journalists. Mr. Rivaud discuss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France, and how the prosecutors and judges determine sentences and systems for parole and ensuring the prevention of re-offenders. Dr. Van Zyl Smit discussed the method of imposing alternative sentences when moving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Dr. Reingard Nisse, presented the punishment regarding sexual crimes and crimes targeting children.

연세-SERI EU 센터는 2013년 1월 21일, 소공동 롯데 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유럽의 강력범죄 대응>이라는 주제로 유럽 강력범죄자 처벌 및 판결 정책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 및 성범죄 사건들로 인하여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으며, 치안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내 국가들도 유사한 고민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의 강력범죄자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 및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토론회는 구형 (sentencing) 사례 및 유럽국의 공공안전기제 등에 대한 원탁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는 프랑스 아미앵 법원의 장필립 리보 검사, 노팅엄 대학교의 더크 반 질 스미트 박사, 브란덴부르크 경찰대학의 레인가르드 니세 박사 등 유럽 법률 전문가 및 집행가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리보 검사는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판사의 형량 결정, 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반 질 스미트 박사는 사형제도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사법 전문가인 니세 박사는 아동범죄와 성범죄 처벌,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제17회 EU Core-Circle 세미나 The 17<sup>th</sup> Core Circle Society Seminar

On December 10<sup>th</sup> 2012, the 17<sup>th</sup>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was held at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at the Republic of Korea. Peter Bekx, Director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Relations and Global Governance in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gave a lecture under the title of ‘Eurozone Crisis Management and Prospects’. He explained that Europe should make an effort to break the negative feedback loop of sovereign debt crisis, financial instability, and economic recession. Participants discussed on political responses for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and Eurozone’s prospects.

12월 10일 월요일 주한 EU 대표부에서 제17회 EU Core-Circl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Eurozone Crisis, Management and Prospects>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집행위 경제 금융총국의 피터 벅스(Peter Bekx) 국제국장이 발표를 맡았다. EU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피터 벅스 국장은 EMU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부채 위기, 금융 불안정, 경제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참여자들과 함께 유로존 위기에 대한 EU의 정책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8회 EU Core-Circle 세미나 The 18<sup>th</sup>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On 13<sup>th</sup> of December 2012,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18<sup>th</sup> Core Circle Society Seminar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Ahn Byung-Uk(Daegu University) who is an expert on EU budget gave a lecture on 'EU Budget and Political Integration'. He argued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e EU budget needs to be increased. However, the negotiations for budget, which covers the 2014-2020 period, faced several difficulties. In addition, he emphasized that the budget reform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U integration and to prepare for aging society.

12월 13일 목요일 삼성경제연구소 510호 회의실에서 제18회 EU Core-Circl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유럽 연합(EU) 예산 갈등과 정치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예산 분야의 전문가인 안병욱 교수(대구대학교)가 발표하였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U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EU 중기(2014~2020년) 예산협상이 회원국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세미나를 통해 EU 예산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병욱 교수는 유럽의 통합 강화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